

데스크칼럼

장승기

산업부장



지난 2월 28일 중동에서 치솟은 전쟁의 불길에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에너지의 심장'인 중동은 전 세계 석유의 절반이 매장된 곳으로, '중동 전쟁'의 장기화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며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유가와 고환율, 고물가 등 이른바 '3고 충격'에 휩싸이며, 단순한 악재가 아닌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이란 충돌로 촉발된 중동 정세 불안은 광주·전남지역 제조업과 수출 현장까지 파고 들었다. 광주 연구원이 지난달 30일 중동 수출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역 제조기업 109곳 중 84.4%가 이번 사태 영향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경영 피해를 예상한 기업은 93.6%에 달해 불확실성이 장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기업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원자재와 에너지 가격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73.9%가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을 주요 애로 요인으로 꼽았다. 이어 해상운임 및 물류비 상승(45.7%),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비용 증가(35.9%) 등이 뒤를 이었다.

중동발 위기, 정부 지원·구조 개선 병행돼야

수출 현장의 체감 위기는 더욱 직접적이다. 수출기업 대부분이 물류 차질과 거래 위축을 체감하는 등 충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같은날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에 따르면 '미-이란 사태 관련 수출업체 애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151개 기업 중 59.0%가 이번 중동 사태로 직·간접적인 수출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전남 수출기업의 경우, 중동 의존도가 46.6%로 수출 지역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아 충격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애로 요인은 물류 분야에 집중됐다.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항목은 해상 운임 상승(25.4%)과 수출 물류 지연(20.0%)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13.7%), 바이어 주문 감소(11.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조업 중심의 충격 여파도 크다. 제조업 관련 품목의 영향 체감 비율은 61.8%로 가장 높았다. 의료, 첨단·에너지 산업 등은 물론이고 기계·장비, 농수산식품 등 지역 주력 수출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중동발 쇼크의 충격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흡수하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 공급선 다변화 등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완충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력과 협상력이 부족해 상황이 녹록치 않다. 때문에 물류비 상승을 넘어 '거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납기 지연으로 바이어와의 연력이 끊기거나 발주가 중단되는 사례도 속출한다. 일부 기업은 계약 체결

직전 거래가 무산되거나, 기존 거래처가 주문을 보류하는 등 신뢰도 저하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운송 지연에 따른 재고 적체와 보관 비용 증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2차 피해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러한 복합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되는 구조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물류비 급등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전남지역 석유화학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 LG화학에 이어 롯데케미칼도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생산공장의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납사) 수급에 비상이 걸리자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23일 나프타분해시설(NCC) 2공정 가동을 멈췄다. 이같은 석유화학 업계의 잇따른 가동 중단은 나프타 수급 차질과 재고 부족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원료 공급난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위기에 직면한 지역 수출기업의 숨통을 틔워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구조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조정과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전략 등이 필요하다. 위기는 어김없이 또 찾아온다. 현재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도 급하지만, 구조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이번 '중동발 쇼크'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면 다음 위기에 똑같은 고통이 되풀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기고

서동삼

전남바이오진흥원 바이오약분부장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도약하기 위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신약개발의 구조적 한계다. 현재 신약 하나가 탄생하기까지 평균 10~15년,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되지만 최종 성공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고비용·저효율' 구조는 혁신 치료제의 신속한 공급을 가로막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근본 요인이다. 최근 미국의 'FDA 현대화법 2.0' 시행은 신약개발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추고 인간 중심의 예측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하면서, 글로벌 시장은 이미 '초기 검증 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오가노이드(Organoid), 마이크로도징(Microdosing), 그리고 오피스(Omics) 기술이 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장기와 유사한 환경을 구현해 기존 동물실험 대비 높은 예측 정확도를 제공하고, 마이크로도징은 방사성동위원소를 활용해 극소량의 약물을 투

대한민국 바이오 골든타임, 답은 화순에 있다

여해 인체 내 약물 작용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여기에 오피스 기반 분석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신약개발의 정밀성과 속도는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합한 'OMO(Organoid-Microdosing-Omics) 패스트트랙'은 신약개발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국가 전략이다. 이는 점입상과 초기 임상 단계에 집중된 시간·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 품이다. 환자 세포 기반 오가노이드 모델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신속히 선별하고, 유망 후보는 마이크로도징 임상으로 인체 내 분포와 작용을 조기에 검증한다. 이어 오피스 분석을 통해 약물의 작용 기전과 환자 맞춤형 치료 가능성을 정밀하게 규명한다. 이와 같은 단계적·통합적 접근은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성공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을 실행 가능한 산업 모델로 구현하는 일이다. 필자는 전남 화순에 'HOFT(Hwasun One-stop Fast Track) 규제특례' 모델 도입을 제안한다. HOFT는 전임상부터 초기 임상까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신약개발 플랫폼이다. 화순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서의 제도적 기반, 화순

전남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임상·연구 인프라, 그리고 오가노이드 평가센터와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이 결합될 경우 전주기 검증이 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가 구축될 수 있다. 특히 오가노이드와 마이크로도징 기술을 동일 지역에서 통합 운영하는 모델은 글로벌에서도 드문 사례로, 화순만의 독보적인 경쟁력이 될 것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연구 거점을 선택하는 기준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생산 능력'이다. HOFT를 통해 축적되는 정밀 데이터는 글로벌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끌어들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수적이다. OMO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전임상과 초기 임상을 연계하는 규제 혁신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신약개발의 승부는 이제 속도와 정확성에 달려 있다. 화순 HOFT 모델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하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원팀으로 움직여 화순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암 치료 신약 개발 허브이자 글로벌 바이오의 중심으로 도약시켜야 한다.

취재수첩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이현규

정치부 부장



생활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퇴근과 이동 방식에 불편이 따르지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이 먼저 절약에 나서고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다. 전남도 역시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산업 현장과 민생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에너지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수급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 대응이 뒤따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선제 대응을 넘어 실제 위기 관리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산업계와 공공부문, 지역사회가 함께 에너지 절약과 효율 개선에 나서야 충격을 줄일 수 있다. 지금은 위기를 분산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며, 일상 속 작은 실천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필요가 있다.

독자투고

조선 청백리 정신과 공직자의 자세

장성군 황룡면에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선 청백리의 대표적인 표상이 아곡 박수량 선생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전남도 기념물 제198호로 등록된 문화유산이기도 한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있지 않아 백비라고 불린다. 왜 비석에 글 새김이 없을까. 박수량 선생은 조선시대 3대 청백리로 손꼽히는데 무려 39년 동안 관직에 붙지하면서 판서까지 오른 인물이었지만 관직이 높았음에도 재물에는 욕심이 없어 사후 장례를 치를 돈조차 없었다고 한다. 임금은 박수량 선생의 묘비에 공석을 새기는 것은 청백리 정신에 누가 될 수 있다며 비문을 못쓰게 하고 맑은 덕을 기리기 위해 백비를 하사하게 되면서부터 그 유래가 됐다고 한다. 제목 임은 시민으로서의 경찰에게 청렴정신은 반드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고 모든 공직자의 표상이 되어야 할 정신이기도 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직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최고의 덕목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청렴이 아닐까 한다. 아곡 박수량 선생의 정신을 기려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가치관으로 또 다른 백비를 만들기 위한 청렴을 다짐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 힘찬 격려를 당부드린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삼서파출소장

사설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더 속도 내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공식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국방부가 최근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예비이전 후보지로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선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통령실 주관 6자 협의체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에 합의한 이후 첫 법적 절차로 지난 2007년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가 시작된 지 18년 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상 입지 결정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는 최종 부지 선정까지 가는 과정이 지난해보다. 먼저 국방부는 광주·전남도·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를 꾸려 후보지 선정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여기에서 이전 후보지가 정해지면 국방부와 광주시는 곧바로 이전 주변 지역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6자 협의체에서 합의한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주민 지원사업이 지역에 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국방부 등과 함께 구체화하는 등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지원계획이 국방부 장관의 최종 이전 부지 선정 계획 공고후 예정된 가장 핵심적이고 까다로운 관민간 주민투표의 찬·반을 가를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단순 보상을 넘어 한국공항공사 유치, 서남권 핵심 공항 도시 육성 등의 청사진 제시도 그런 맥락에서다. 주민투표에서 과반이상이 찬성할 경우 최종 이전 부지 선정절차를 밟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부지 선정 절차가 완료돼 사업 시행 단계로 넘어가도 신공항 건설,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최소 7년 이상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 도사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 아래 추진되는 이 사업은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한 모든 기반을 다져야 한다. 구성원간의 이견으로 최종 부지 선정 절차가 차질없이 이뤄질 경우 차기 정부에서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의대' 캠퍼스, 동·서부 분산이 '해결책'

전남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 의과대 캠퍼스와 부속병원 소재지 갈등을 해소하고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최근 부속병원을 서부권과 동부권에 각각 설립해, 의대 4·5·6학년생들이 전공학부에 따라 실습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부속병원은 각각 지자체가 건립을 지원하거나, 기존 공공병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100명의 의대 정원을 두 곳에 50명씩 나눠 배정하는 안과 한 곳엔 의대 1·2학년이 배우는 의예과, 다른 곳엔 3학년이 배우는 의학과를 배치하는 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의 이같은 제안은 그동안 두 지역의 의대 캠퍼스 유치 경쟁을 벌이면서 갈등이 커져 전남립의대 설립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두 대학은 지난 2024년 11월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를 유치했지만, 막상 통합신청서 작성을 앞두고 대학본부와 의대 위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요청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엔 '통합 대학본부'와 '신설 의대'를 나눠 갖기로 했지만, 두 대학 모두 허를 찌른 대학본부보다 의대 유지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 경선에서도 이런 갈등이 여과없이 표출됐다. 이에 김의원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순천향대 의과대학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이를 제시한 것이다. 지난 1978년 개교한 순천향대 의대는 충남 아산 본교 캠퍼스에 의예과를, 충남 천안 캠퍼스에 의학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실습이 병행되는 임상교육은 서울,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구미 등 4곳의 순천향대 부속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의 제안은 꽤 설득력 있다. 1990년 목포대의 건의로 시작된 전남의대 설립이 그동안의 우려곡절 끝에 이재명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돼 추진되고 있는데 이제 지역간 갈등으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두 대학이 5월까지 이들 안을 협의, 신청서를 낼 경우 당초 2030년 개교 예정인 전남의과대 개교가 2028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두 대학과 주민들의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